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9년 7월

## “다랭이논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보전 방향 모색”

### 동북아 다랭이논 국제심포지엄과 사진전 7월 23일 개최



‘동북아 다랭이논의 새로운 가치와 보전활동’이란 주제로 7월 23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23일 울진 백암온천 한화리조트 백암홀에서 ‘동북아다랭이논의 새로운 가치와 보전활동’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과 다랭이논 사진전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한·중·일 다랭이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랭이논의 친환경 생산 방식, 다양한 가치 평가, 보전활동 등에 관한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랭이논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지역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기원 울진 부군수가 축사를 했다.

#### 다랭이논 역사·전통·문화 가치 커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교수는 “다랭이논은 환경생태적으로 논외의 다원적 기능을 담당하며 미생물이나 어류, 조류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경제적으로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관광소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역사·전통·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다랭이논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논을 지역의 공유 자산화하고, 다랭이논의 주인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다랭이논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도 다랭이논 보전 위해 노력

일본 다랭이논학회 나카시마 미네히로 회장은 “일본의 다랭이논 현상과 보전활동”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나카시마 회장은 “1970년에 일본이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다랭이논부터 휴경지화에 들어가 1988년에 비해 2008년에 다랭이논이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다랭이논의 보전을 위해서 2000년부터 직접지불

제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 다랭이논 주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흥허하니다랭이논보전발전협회 장홍편 회장은 ‘중국 운남성의 다랭이논 실태와 보전활동’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중국 흥허하니 다랭이논은 운남성 남부지역 애뢰산맥 중하단의 흥허류역으로 면적은 총 5만 4천ha에 달하며 삼림, 마을, 하천이 잘 어울려 순환생태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흥허하니 다랭이논의 역사와 문화, 경제, 과학, 미학적 가치를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사진전, 생태·경관적 가치 확산 기여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인희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다랭이논 이용과 보전실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산청군 신촌리와 함평군 창원리를 중심으로 다랭이논의 이용실태를 밝히며 다랭이논의 가치와 유지·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환경대학교 서종혁 교수 사회로 토론이 열려 한국농업사학회 구자옥 회장, 우리 연구원 김태곤 지역산업팀장, 문화일보 박경일 기자, 협성대학교 윤원근 교수, 남해군 가천다랭이마을 이창남 이장, 일본 우츠노미야대학 미즈타니 마사카주 교수, 일본다랭이논 나카시마 미네히로 회장, 중국 흥허하니다랭이논보전발전협회 장홍편 회장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특히 이번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한·중·일 다랭이논 사진 90여 점을 야외에 전시해 다랭이논이 갖고 있는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 농업·농촌 개발 주제로 베트남과 워크숍 개최



베트남과 우리 연구원은 7월 16일 연구원에서 농업·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7월 16일 중회의실에서 베트남과 농업·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앞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호수안 홍 차관은 오세익 원장을 방문하여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의 농업·농촌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주길 당부했다. 오 원장은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한 농업·농촌발전전략정책연구소(IPSARD)를 비롯한 관련된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재 부원장 사회로 워크숍이 열려 허장 연구위원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포함한 농업·농촌개발 정책 및 한·베트남 교류사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를 마친 뒤 한·베트남 농업개발협력 방안과 한·베트남 농업·농촌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지도자의 역할, 농업·농촌 투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워크숍에는 베트남의 호수안 홍 농업농촌개발부 차관과 라반리 농업농촌개발부 협력 및 농촌개발국 국장, 호양 티 쯩 농업농촌개발부 국제협력국 부국장, 응웬 후 딕 농업농촌개발부 사무국 부국장을 비롯 양자협력과장, 농촌개발과장, 농업농촌개발저널 부국장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박성재 부원장, 강창용 기획조정실장, 이동필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권태진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과 농업·농촌개발 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북한중국팀 정책워크숍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북한중국팀은 7월 27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민간지원단체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현황과 진로’란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현행 대북 농업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 민간단체, 정책실무자, 연구자가 이해를 함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

능한 대북 농업지원사업 추진 방식을 모색하고자 열게 되었다. 우리 연구원 김영훈 북한중국팀장의 사회로 워크숍이 열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남북협력사업국장과 월드비전의 김혜영 북한사업과장이 각각 단체별 대북 농업지원사업 현황, 문제, 발전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 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통일부의 실무담당자와 연구원 직원들, 발표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그간 추진된 농업지원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사업 추진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여 북한 농업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짚어 본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북 농업지원사업을 기능과 분야로 구분하여 앞으로 주제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합의했다.

##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전자기후도 활용



기후변화대응포럼은 경희대학교 윤진일 교수를 초청, 세미나를 7월 7일 개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과제 수행 관련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포럼은 7월 7일 경희대학교 윤진일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제4차)를 개최했다. 윤 교수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자기후도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전자기후도 관련 국내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기후변화 적응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기본기후도(1차기후도)에 근거하여 평균, 적산, 편차 등 통계량을 계산함으로써 농업기후지수의 분포도(2차기

후도)를 만들 수 있으며, 1, 2차 기후도에 의해 농업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동시킨 결과를 분석 기후도로 작성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사 지원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전자기후도를 가지고 고품질 후지 품종 재배적지를 판정하거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의 과수 동해 위험도를 예측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전자기후도 적용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농림업 분야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윤 교수는 밝히며, “전자기후도가 토양정보-작물모형과 결합하면 적지적작-계획영농을 위한 미래 신기술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친 뒤 전자기후도의 타당성 평가, 다양한 작목 및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 등 전자기후도 전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농업부문 전략

김 창 길 연구위원

기존의 주력산업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은 한계에 달하고 있고, 에너지·기후 시대를 맞아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은 녹색기술, 녹색산업, 청정 에너지 확대를 통해 환경이슈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 녹색성장 5개년 마스터플랜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14일에 관련부처, 국책·민간연구원 및 학계 등과 수차례 논의하고, 심층적인 연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발표하였다.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비전으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분야,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녹색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농축수산물 부문은 아산화질소와 메탄가스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들 수 있다. 경종부문에서 아산화질소 배출 감축을 위해 질소비료 사용 감축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확대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축산부문은 메탄가스 감축을 위해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에너지화 등을 담고 있다. 식품부문은 식품의 생산·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저감 기술, 식품 보존기한 연장 및 환경 친화형 포장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농업부문 주요 내용

둘째, 온실가스 흡수분야에서 탄소순환 사회 정착을 위해 음식물의 순환 단계별 원천 감량과 식습관 개선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음식 폐기물 감량추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휴경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다년생 목본작물 재배를 통한 탄소저장 확충과 최소경운 및 식물체 잔사 관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스템 보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방안으로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영향 평가 및 예측, 실시간 농업생태계 변동 감시·예측에 근거하여 토양·양분 종합관리와 자원순환형 농업생산체계 구축,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원인 분석과 피해방지 대책, 내열성·내재해성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보급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과 관련 농업부문 대책으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물농약과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신소재 산업육성, 고부가 중차 산업화 기술개발, 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를 이용한 신기능성 작물 및 신소재 산업화 촉진 등을 담고 있다.

다섯째, 녹색산업 육성과 관련 식품분야 녹색산업화를 위해 녹색기술을 통한 고부가 식품 전략품목과 미래 유망 식품·식품소재 개발, BT·NT·정보기술(IT) 등 신기술 융합 식품기술 및 안전성 관련 기술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식세계화,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현대화와 국산 천일염의 고급화를 통한 세계 명품화 전략, 식품산업 발전 핵심 인프

라로 세계김치연구소 설립과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농업부문 과제를 미래 농업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계획 기간 동안 녹색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사업 발굴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전략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 절감형 녹색기술인 지열·공기열·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농업분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평가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산을 유도하는 실행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을 녹색성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정체제 전반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농업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 증대를 위해 현행 농업구조 정책, 농업생산기반정책, 농산물유통정책, 농가소득·경영안정정책 등 농정 전반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통해 농업정책과 녹색성장정책과의 통합·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림수산물부에서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녹색성장정책관과 녹색미래전략과가 신설되어 농업분야 녹색성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녹색성장의 5개년 계획을 농업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추진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농업은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와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녹색산업으로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R**



## 한·EU FTA와 국내대책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어 9월쯤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네 번째로 큰 수입시장으로,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9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EU와의 FTA 체결은 양국 간의 교역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EU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EU의 농업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한·미 FTA와 동시에 이행에 들어갈 경우 추가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이다.

### 한·칠레 대책보다 개선되어야

EU와의 FTA 타결을 계기로 다시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효과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지지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대책 논의에서 참고가 되는 것은 한·칠레 FTA 대책을 추진해온 경험과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 대책이다. 한·칠레 FTA 대책은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한·EU FTA 대책은 미국과의 FTA 타결 시 발표되었던 지원방식이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제고 대책의 기본 방향은 한·칠레 때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단기 소득보전 대책은 차이가 많다.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대책은 한·칠레 FTA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폐업 및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은

한·칠레 대책의 경우 사전적으로 지정되었으나 한·미 대책에서는 사후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다. 가격차 보상 방식은 조수입 보상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폐업 보상 기준도 순수입에서 순이익으로 변경되어 보상액이 감소하였다.

### 예방적 조치 감안돼야

한·칠레 FTA 대책 가운데 가장 크게 비판을 받은 것은 복숭아 폐원사업이다. 복숭아는 칠레와의 FTA로 관세가 10년 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이지만 식물검역 문제로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입으로 인한 국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지원금의 75%가 복숭아 폐원지원에 사용되었다. 폐원면적에서 복숭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사후적으로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 가격, 소득 등 통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품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 발생 후 폐업, 소득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가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숙제로 남는다.


한·칠레 대책에서 수입 증가로 가격이 80% 이하(발동기준가격)로 떨어지면 시장가격과 발동기준가격 차의 8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미 대책에서는 가격차 보상 방식이 조수입차 보상방식으로 변경된다. 조수입(생산량에 가격을 곱한 것)이 기준조수입의 80% 이하로 하락하면 기준조수입과 실제 조수입 차이의 85%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 목표가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에 있기 때문에 가격차 방식에 비

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폐업지원 대상은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예, 과수, 축산 등)이며, 조수입에서 경영비, 자가노력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3년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한·칠레 대책에서는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액이 한·미 대책에 비해 많았다. 한·칠레 대책의 경우 폐업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폐업 신청자가 과다하였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폐업 후 5년 이내에 폐업 품목이 포함된 품목군을 재배(경영)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 자원낭비 막아야

한·칠레 대책에 의해 2004년부터 폐원한 농가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복숭아 재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이 복숭아 재배로 돌아올 경우 한·칠레 대책의 효과(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등)는 반감된다. 복숭아에 대한 관세는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2014년이면 0%가 된다. 식물검역 문제가 해결될 경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5년이라는 금지기간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과수 종류에 따라 식재 후 수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농가들은 공급 증가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불만의 소리도 들린다. 한쪽을 축소하면 다른 쪽이 증가하는 '푹선풀효과'나 폐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동일 작목을 경영하는 데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OECD 글로벌 포럼,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전망 논의

배종하 초빙연구위원

지난 6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농업에 관한 글로벌포럼(Global Forum)이 열렸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최근 있었던 곡물 가격의 상승과 관련하여 세계농업의 중장기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논의했는데, 최근 있었던 농산물 가격 급등과 같은 사태가 앞으로 또 있을 것인지, 즉, 가격에 대한 전망이 첫 번째 주제이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식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과연 공급이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였다.

### 농산물 가격은 안정될 것인가?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추세를 볼 때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하락해 왔다. 하지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OECD가 공동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농산물 가격은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가격 변동은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 특히 개도국의 수입 증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군 별로 보면 곡물 생산은 소폭 늘어나고 축산물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닭고기 생산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전망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요인은 기후변화, 세계경제의 불안정, 교역 증가 등과 함께 바이오연료의 수요, 물 부족 등을 들 수 있고 원유가격, 미국 달러의 환율, 금융시장의 투기자금, 급격한 수요변화 등이 가격변동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개도국들이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비축, 해외농업 투자, 중앙기곡물구매계약, 순곡물수입국에 대한 저리자금 융자 방안 등이 거론

되었다. 최근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각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해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이 사례를 발표하였다.

###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어떻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은 주로 식량 순수입국들인데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거나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많이 있었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수취가격을 상향 조정하거나 비료, 농약 등 투입재에 보조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통제하여 빈곤층이 최소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갑작스런 가격 상승에 대응한 단기적인 정책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수단들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성격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상의 감축대상정책(Amber Box)들이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도 비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농업정책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인도는 농민들의 소득 수준이 지극히 열악하고 토지분배가 왜곡되어 있다. 정부의 재정능력도 취약하여 부채 등으로 자살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고 서부 벵갈 지역에서는 식량 폭동이 일어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의 가격 상승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빈곤한 소비자들을 고려한 나머지 많은 개도국들이 단기적으로 관세 등을 동원하여 국제시장의 가격 상승이 국내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정책들을 썼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경

제위기, 가격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되었다.

### 식량수요 증대, 충분한 식량 확보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식량안보 확보 전망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09년 현재 지구상에는 약 10억 명의 빈곤인구가 존재하는데, 이 숫자는 몇 년 전에 비해 늘어나 식량사정은 단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소득 성장, 도시화 등으로 2050년 식량 수요는 현재보다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식량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FAO, 민간 등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식량공급은 낙관적이나 기술, 인프라, 제도 등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를 위한 투자, 식량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급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개도국인데 개도국 농업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capacity building)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간회사인 신젠타는 지금까지 농업생산성 증가는 연 1% 수준이나 앞으로 새로운 기술로 연 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최근의 가격상승, 불안은 지속되는 현상이라 할 수는 없고 단기적인 현상이지만 앞으로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다소 상승하리라는 전망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생산 잠재력,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는 물부족, 인구와 소득성장, 바이오연료, 환경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R**

# 동북아의 다랭이논 대책, 3국 3색의 접근방법

김태곤 연구위원

다랭이논은 산간지역에서 해안지역, 도서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비탈진 골짜기에 좁고 길고 작은 형상의 논이 층층으로 있다고 해서 다락논, 다랑이논, 다랑치라고 한다. 샷갓 밑에도 하나, 소가 누웠던 자리에도 하나 크기라고 해서 샷갓배미, 소배미라고도 한다.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모양도 다르다.

일본에서는 선반 형상을 상징하여 봉전(棚田), 중국에서는 사다리 모양이라고 해서 제전(梯田)이라 부른다. 밭농업이 서구 풍토에 적합한 농업이라면 논농업은 아시아몬순지역에 적합한 농업이다. 그 정점에 다랭이논이 있다. 동북아 3국 모두 다랭이논이 존재하지만 현상과 보전활동은 상이하다.

## 논농업은 아시아몬순지역에 적합한 농업형태

우리나라에서는 다랭이논의 일반적인 정의는 없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경사도 14% 이상의 농지가 일정비율 이상이면 조건불리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중에서 밭에 대해서만 직불제를 실시하여 농업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사도가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는 한계농지로 정의하여 비농업용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일본에서는 경사도 20분의 1 이상의 사면에 있는 1ha 이상의 논을 다랭이논이라고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정성적으로는 형상에 관계없이 경사지에 등고선에 따라 만들어지고 바다가 수평이면서 선반 형상의 논으로 정의한다. 전국에 걸쳐 산악지역이나 해안 및 도서지역에 분포하며 급경사지에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515개 필지가 모여서 1ha의 규모인 지역도 있다. 지역에 따라 주로 석축으로 된 다랭이논도 많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정의는 없다. 비가 많은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규모나 높이·역사·문화 등의 면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압도한다. 운남성 홍허하니(紅河哈尼) 지역에서는 1,300년 전 해발 100미터에서 2,500미터까지 수 많은 산 전체를 등고선에 따라 다랭이논을 개간하여 오늘날까지 빗물에 의존하여 쌀 농업을 계속하고 있다. 소수 민족의 생존과 생활의 기초가 되어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민족존속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다랭이논에 대해 최근 새로운 가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다랭이논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하여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식량을 자급한다. 동시에 소규모 댐 역할을 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토양유실을 경감한다.

다랭이논은 송사리·개구리·사마귀·물방개 등 어류·양서류·곤충류 등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인공습지'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에서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된다.

즉 다랭이논은 농업생산을 통하여 보전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경관을 형성하며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역사가 경과할수록 이러한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현실은 이와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협소하고 농로가 불량하여 경작조건이 불리하고, 습지가 많아서 농기계 이용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다랭이논이다. 단수도 평지에 비해 떨어진다. 이러한 요인으로 휴경이 되고 유실되는 사례가 늘어난다. 중국은 예외지만 앞으로 고령화되고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다랭이논의 유실 추세는 가속화할 것이다.

전남 완도군 청산면 부흥리에 '구들 논'이란 것이 있다. 논바닥에 온돌방의 구들과 같은 얇은 바위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가급적 누수를 방지하고, 또 누수된 물은 아궁이 같은 곳에 모아서 다시 아랫쪽 논에 흘러가게 하고 있다. 빗물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쌀을 생산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지역조건에 특화된 수리시스템이며 보전되어야 할 전통자원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사지에 위치하여 경작조건이 불리한 농지 중, 상당수가 유휴화하고, 유실·매몰되어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농업생산 감소, 지역농업 붕괴, 식량자급률 하락, 국토·경관 훼손으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 한중일 3국이 다른 접근, 경작이 최선의 보전활동

다랭이논의 보전을 위한 활동은 한중일 3국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규모나 역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네스코에 등록하여 보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중산간직불제로서 경작을 지원하는 등 보전에 적극적이다. 또한 다랭이논 오너제도, 도농교류, 지산지소 등을 활용하는 민간차원의 보전 활동도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포기해야 할 한계농지로 지정하여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는 노선이다.

경사지에 위치한 농지는 경작하지 않으면 논두렁이 무너지고 논이 유실된다. '경작'이 최선의 보전활동이다. 경작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간이경지정리 등으로 경작조건을 불리성을 개선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지지역과의 소득격차 등 경제적 불리성을 직불제로서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R**

# 7월 주요 농정 동향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안)

7월 6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위기와 에너지·자원 위기에 함께 직면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장기적 신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비전을 가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녹색성장이라 함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을 의미한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3대 추진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며, 10대 정책방향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이다.

또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세워 경제 개발 계획의 실용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앞에서 언급한 10대 정책방향의 주요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바, 예산의 운용 시계(time frame)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올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이 공동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발표하였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총공급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37%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유력한 수단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의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3.78% 달성을 위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전체 보급 목표율의 83.9%에 해당하는 3.17%를 실현할 예정이다.

폐자원의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서는 최첨단 글로벌 기술력 확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별로 개별 업체의 잉여 폐자원에너지를 공유 및 산업폐자원에너지 활성

화 종합대책 등 산업계 폐자원에너지화 촉진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부문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방안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공급확대, 목재펠릿 이용확대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바다숲 조성과 대규모 해양농장을 조성 등 수산 및 해양 바이오매스 에너지화가 있다.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농어업보조금 개편 합의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민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7월 27일 「농어업 선진화 추진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추진안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농업보조금 개편에 합의하고, 향후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288개에 이르는 개별 보조금 사업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보조금 전체 규모(11.2조원)와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5.2조원)은 유지하되, 지원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신설·폐지·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개별시설 보조금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농어업 교육·훈련·컨설팅 관련 보조금은 확대한다. 유기질 비료 지원 등 투입재 보조금은 친환경 지원으로 전환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국제 보조금 규범과의 합치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일회성·소모성 보조를 지양하여 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효율적인 집행 및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분야별 보조금의 지원방향을 살펴보면, 직접 지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전형 직불제의 유형으로 개편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공공의 성격을 띠게 된다. 경영 안전형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이 기준 소득 밑으로 떨어지면 이를 메워주는 구실을 하게 되며, 경영 규모 및 위험이 큰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등 농어촌에 대한 복지 지원 확충,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 확대,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해 보조금의 정책적 효과를 토대로 지원하고, 보조금의 체계를 단순화·유형화 할 것이다. 보조금 개편을 위해 폐지사업, 존치사업, 확대사업, 신설사업, 전환사업 등 다양한 수단도 활용할 것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이번 추진안 발표로 1단계 활동을 마치고 8월 이후부터 2단계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리: 미래정책연구실)

## 베트남 IPSARD와 MOU 체결



오세익 원장은 7월 2일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전략정책연구소와 MOU를 체결했다.

오세익 원장은 7월 2일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전략정책연구소(IPSARD)와 연구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IPSARD는 베트남 농업·농촌발전부(MARD) 산하 농업·농촌 관련 정부정책 및 전략 등을 수립하는 연구소로 농정싱크탱크인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상호 관심 분야에 공동연구 추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양 연구기관은 MOU체결에 따라 7월 2일 베트남 현지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 IPSARD 농촌발전센터 센터장인 부 트링 빈 박사가 '지역중심 농촌개발에 대한 베트남 정부정책'을 주제로, 한국 측에서는 아시아농업연구센터장인 허장 박사가 '한국의 농촌개발이 베트남 농촌개발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한국의 농촌개발 및 경제개발 경험과 한국의 급속한 농업·농촌경제 성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더불어 IPSARD는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측업무를 전수받기를 위해 향후 구체적인 정보교환 등의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미래정책연구실 농식품부와 워크숍

미래정책연구실은 7월 3일 농림수산물부와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어업·농어촌 미래전략과제 정책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농어업·농어촌 부분의 미래전략과제 정책화 관련하여 열려 기성성 식품 시대의 대응 전략과 글로벌 개

방 경제 하의 국가식량안보 전략, 농어업의 글로벌 역량 분석, 21세기 수산정책방향과 비전 제시, 농어촌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전략 관련 방안 등으로 나뉘어 열려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워크숍에는 미래정책연구실 김명환 선임연구위원과 김병률 실장을 비롯 실원 10명, 농림수산물부 녹색미래전략과 김종훈 국장과 이충원 과장 등 15명의 직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홍현표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친환경, 농촌개발 주제로 현장토론회 개최



제4회 KREI 현장토론회를 7월 22일 충북 제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이 농촌현장에서 우리 농업의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KREI 현장토론회를 7월 22일 충북 제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4회 KREI 현장토론회는 친환경농업, 농촌마을 개발 및 지역활성화,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오세익 원장은 "친환경농업과 농촌마

### 연구진 대외활동

△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공학한림원이 6월 30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공강형 첨단농업모델 구축과 실용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김병률 연구위원과 이명기 부연구위원은 7월 17일 강원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업 경쟁력 개념과 저해요인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김태근 연구위원은 7월 14일 익산에서 전북지역농업연구원이 주관한 교육에서 '지역단위 전략적 농업경영'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 김창길 연구위원은 7월 10일 제주중소기업센터 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송미령 연구위원은 7월 8일 2009년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기초생활권 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신용광 부연구위원과 김재한 초청연구원은 7월 17일 강원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가정 내 김치 구입형태 및 선호도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을 개발은 물론 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농정 전반에 대해 진솔한 토론이 이루어져 연구에 반영하고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률 미래정책연구실장 사회로 현장토론회를 열어 김창길 연구위원이 친환경 농업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 송미령 연구위원이 농어촌 마을 개발 등 농촌개발 정책에 대해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을 하였다.

이날 토론에는 제천지역 생산자조직 관계자와 농정 관련 공무원, KREI리porter 등 20명과 연구원의 친환경농업과 지역농업개발 연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하였다.